

경호처 뒤에 숨어 정국 혼란·국민 분열 키우는 尹

공수처 체포 영장 집행 대치 한남동 관저 찬반 집회 긴장 고조 野 체포 재집행 촉구·與 장외집회 검토...정치권 분열도 커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면서 정국 혼란과 국민 갈등만 커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법원 체포영장 집행 불응 행위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021년 한 방송국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국민 앞에 숨지도 않겠다”고 큰소리 쳤던 윤 대통령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면서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12·3 비상 계엄’ 배경으로 밝혔던 입법부 부정에 이어 사법부마저 부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을 꿈꿨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사저 진입을 막은 경호처와 물리적 마찰을 빚은 데 이어 ‘발포’ 우려도 커지는 등 국정 혼란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점차 리스크 대상국으로 여기고 외국인 관광객도 발길을 끊는 등 전 국민을 향한 ‘계엄-탄핵 정국’이 구체화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대통령 체포, 국민 분열만 가중=새해 첫 주말인 4일과 휴일이었던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선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놓고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다.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한남동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탄핵 찬반 진영 간 긴장도 고조됐다.

간밤에 내린 눈 속에서도 국민들은 보은 비닐을 뒤집어 쓰고, 야영을 하는 등 각자의 주장을 펴기 위해 엄동설한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5일 오전 10시께 관저 인근 일선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2박 3일간 관저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비상행동은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

본)는 1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대국본은 오후 4시 30분께에는 집회 장소를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옮겼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과 촛불행동이 각각 한남초와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가 물리적 충돌을 한 것처럼 국민들 간 ‘진영 간 갈등’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여야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아=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과 체포에 당력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은 야당과 공수처 규탄 장외집회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국민의 갈등과 불안은 더욱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와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등 당내 기구를 필두로 계엄 사태의 진상을 알리는 여론전을 펴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로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날 때까지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국회 파견단에도 불참한다.

야권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불발된 것과 관련, 박종준 경호처장 처벌과 신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 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운영위·법사위·행안위 합동 비상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체포영장 집행을 저항한 경호처 해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힘겨루기’에 나선다. 당 지도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나 광화문 광장 등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들과 연대하는 형태가 아닌,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이 따로 모여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검사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서 소형버스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소형 전술차량으로 만든 차벽에 가로막혀 있다. (조선일보 제공)

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비판하면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불러 온 분열=이 같은 여야와 국민의 갈등을 윤 대통령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사저 인근의 탄핵 반대 집회 관계자에게 “나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보고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집회 규모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추진하는 쪽과 이를 방어하는 대리인들의 각기 다른 법적 공방도 찬반 진영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軍, 공수처에 길 터주고...경찰, 경호 요청 거부

尹 체포영장 집행 1·2차 관문

군·경, 경호처에 적극 협조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 집행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도 호응하지 않았다.

5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전선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다.

55경비단은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철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수방사 예하이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도 외곽에서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

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철문을 통과한 수사관들이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가로로 주차된 버스였다.

경호처 직원 50여명과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되는 군부대 인력 30~40명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저지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뚫렸다.

이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에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경비단 지휘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지 부대장들에게 공수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2경비단도 정위지대로 관저 외곽을 지키며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 또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찰이 최 대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협조 요청에 대한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경호처 인력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인력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 무산 후 대통령 경호부대인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尹측, 체포영장 집행 강력반발...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키로

“경찰·국방부 경호지시 불응”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윤동은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

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영장집행에 착수했다”며 “이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과 국방부가 윤 대통령 관저 지역에 경호 경비부대 배치할 늘려 달라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요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부장관 직무대행)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불응해 항명했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또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촬영한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의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행위는 명백히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장장성
Jangseong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성 필암서원

청산도 절로 절로
녹수도 절로 절로
산도 절로 물도 절로하니
산수간나도 절로
아마도 절로 삼긴 인생이라
절로절로 늙사오리

- 김인후 선생의 '자연가(自然歌)' -





장성군
Jangseong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